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배제는 치졸한 언론통제”

언론 5단체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
윤대통령 “해외순방 국익 걸려있어”
박홍근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
국힘 “국민피해 예방위한 조치”

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와 언론이 견강한 갈등 관계,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그 래야 하는 일인데, 지금은 이게 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감정싸움으로까지 가고 있는 양상” 이 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은 야당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해외 순 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제1면 먼저 보도했 다는 이유로 MBC를 배제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 라며 당장 보복 행위를 거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순방 MBC 배제는 치졸하고 황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 민간인인 이원 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까지 대통령 전용기 에 태우지 않았느냐”며 “그러면서 국민 알권리를 위 해 동행하는 언론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윤배 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 지공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 기에 보도 언론사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까지 이어갔다”고 언 급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누가 봐 도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MBC가 뉴욕 순방 시 대통령이 행한 비속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치 졸한 보복 행정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해외순방 때 마다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 는 언론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그토 록 불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 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계 5개 단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 아 순방 때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 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10일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 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 사실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 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 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 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 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 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 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세제개편시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 ↓

교육교부금은 13조원 감소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각 지 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 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5년간 총 35조원 줄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 예산 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2027년까 지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으로 22조원이 감소한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조5000억원이 줄어든다. 2024년에는 4조7000억원, 2025년에

4조9000억원, 2026년에 4조9000억원, 2027년 에 5조원이 각각 감소한다. 연평균으로 4조4000 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지방교부세로 내 려보내야 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가 재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은 5년간 1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대비 내년엔 1조원, 2024 년에 2조8000억원, 2025년에 3조원, 2026년에 3조원, 2027년에 3조1000억원이 줄어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아세안 참석 불가피...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경제·국익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자회의의 참석을 위한 동 남아 순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기업들의 경제활 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 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이태 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 석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워낙 우리 국민들 의 경제 생산 활동과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 라 힘들지만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의 참석을 위해 다음날부터 4박 6일간 캄보 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먼저 ASEAN 정상회의에 대해 “많은 국가가 ‘아세안의 중심성’이란 것을 받아들이며 관심을 집 중하고 있다”며 “물동량 50%가 아세안 지역에서 움직이고 수만 개의 우리 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하 고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나라가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저도 자유·평화·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 원칙을 발표하고 ‘아세안 국 가 연대구상’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다자회의에서 중요 한 양자 회담들이 여러 가지 있다”며 “한미일 정상 회담은 확정됐고 몇 가지 양자 회담도 확정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ASEAN에 이어 참석하는 G20 정 상회의에 대해선 “G20은 B20이라는 기업인 회의 와 투트랙으로 이어지는 데 두 가지 회의에 전부 참 석한다”며 “일정을 줄여 G20은 이틀만 참석하고 받 늦게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율 30% 안팎

방송 3사 여론조사

취임 6개월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라는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8 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0.1%, 부정 평가는 64.9%를 기록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에서 8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3.4%, 부정 평가가 59.7%로 집계됐고,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은 28.7%, 부정은 63.5%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은 3사 모두 부 정 평가가 70% 안팎을 기록해 긍정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해당 여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슬로건 일반부 [우수작]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광주시교육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 청렴실현

